

# 보건당국 '송파60번발' 확진자 이용 대중교통 탑승객 파악

### 지하철·시외버스 등 타고 출퇴근 "접촉자 확인 어려워"

### 폐쇄회로(CC)TV 영상·거래 내역 등으로 접촉자 찾아

방역 당국이 '서울 송파 60번'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용한 교통수단 탑승객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스크를 써야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여기면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송파 60번' A씨(50대 여성), '전남 35번' B씨(30대 여성·보성) 등 코로나19 확진자들과 함께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을 이용한 시민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A씨가 서울과 광주를 오갈 때 이용한 SRT 경우 서울로 돌아갈 때만 A씨 주변에 5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차 경우 앞뒤 3열 탑승자를 접촉자로 분류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들과 승무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남 35번째 확진자 B씨(30대 여성·보성)가 출퇴근에 이용했던 무궁화호 열차와 시외버스, 지하철 탑승객들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거래 내역으로 파악한 기차·시외버스 탑승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안내했다.

특정 못한 시민들도 검사받게끔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4~17일 오전 6시50분 전남 보성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탔거나 오후 4시 30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보성 율포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도 보냈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 거래 내역 등으로 접촉자를 찾는 한편, 선별진료소를 찾아오는 시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기차를 탈 수 없어 (전파 위험이) 어느 정도 차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에서 초등학생 남매와 90대 여성을 포함해 '송파 60번'의 친인척 9명, 이들과 접촉한 3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광주 11명·전남 1명) 생겼다.

방역 당국은 18일 초등학교 남매가 다니는 서구 한 초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 37명 전수검사를 했고 19일 모두 '음성' 판정 받았다. 정승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19일 지하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 35번' 환자는 '송파 60번'과 접촉한 광주 177번 환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도시철도 제공)



옵티머스 피해자들 "사기판매 규탄 피켓시위" 옵티머스펀드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사기판매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재판서 '별건수사' 논란

### 검찰, 서류 보관한 관계자 진술 등 추가 제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별건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별건조사는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 등을 이용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이다.

20일 광주지법에서는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이날 권리당원 모집 공모나 요청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입당원서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제출 받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별건수사 논란이 제기됐었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혜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입당원서'는 별건으로 증

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도 "당초 이 사건의 수사가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던 중에 입당원서를 임의제출받았다"며 "별건수사 중에 입당원서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제출 받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서류를 확보해 수사가 진행될 만큼 임의제출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해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최이슬 기자

## 무등산 일대 야간 폭주행위 집중단속

### 과속·난폭 운전·공동위험 행위·소음기 불법 개변조 등

광주지방경찰청은 무등산 일대에서 야간 폭주·공동위험 행위에 대해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최근 동구 지산유원지와 북구 제4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야간에 레이싱을 일삼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집중단속

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협업체 집중단속 기간 중 매일 취약시간대에 교통경찰관과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경력을 동원한다. 과속과 난폭운전, 공동위험 행위, 굉음 유발 소음기 등 불법 개·변조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제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구간·시간대에 대해 실태 파악을 마쳤다.

또 현장 단속 외에도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하고 주변 폐쇄회로TV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공동위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등화장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민정 기자

## '에크모 치료' 광주 코로나 중증환자 2명 중 1명 '호전'

### 광주서 확진자 2명 사망

광주 코로나19 환자 중 에크모(ECMO, 최외막 산소공급) 치료를 받은 2명 중 1명의 상태가 호전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중증환자는 현재 3명이다. 상태가 더 위중했던 70대와 50대 확진자는 에크모 치료를, 또다른 50대는 산소를 투입하는 '고유량 산소요법'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70대 확진자의 상태는 다소 호전돼 '고유량 산소요법' 치료로 전환됐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는 50대는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다.

에크모는 자발적 호흡이 힘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맨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몸 밖에서 인공 폐와 혈액 펌프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에 넣어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기기다.

앞서 코로나19 중증환자 중 광주 112번(90대 여성)과 76번(70대 남성) 확진자는 지난 16일과 19일 치료중 숨졌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에크모는 자발적으로 호흡하기 힘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맨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가장 위중한 상태를 의미한다"며 "대구의 사례를 보면 에크모까지 사용했다가 호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